

與, 윤석열 '수사청 반발' 확산 경계... "검찰개혁 차분히 진행"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에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직을 걸고 막겠다는 윤 총장과 각을 세울 경우 수사청 논의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윤 총장의 체급을 키워주게 된다는 계산

이낙연 "檢개혁 관련 의견 법무부 통해서"尹 반기에 돌리 비판
오늘 검찰개혁특위 회의...수사청 설치법 금주 발의 어려울 듯
임은정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서 배제"

에 확산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윤 총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 등의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오늘부터 지역 검찰청을 돌아 여론전을 펼칠 계획인가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라는 청와대의 권고가 무색하다. 그의 후 안무치가 일제치를 넘어섰다"고 쓰는 등 당내 비판 여론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수사청 신설) 법안을 준비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반발에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당내 검찰개혁 특위 차원의 '수사청법'이 발의될 거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었다"라며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수사청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다"라며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조율이 끝나는데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청법을 3월에 발의해 늦어도 6월에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

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문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제한하는 문제 등도 논의되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4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법사위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총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도 1차로 당정 협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이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론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말장난 그만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은정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 그러다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안철수 "단일화, 특정 정당 이해타산 따르면 선거 진다"

국민의힘, 선거인단 검토...김근식 "다른 방식 가능"
안철수 "본선 승리가 중요...후보되는 게 중요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에서 야권 단일화 방식으로 100% 시민 여론조사가 아닌 시민참여 선거인단 방식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단일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해진다면 아무리 야권 단일후보가 뽑히더라도 선거에서는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오전 야권 단일화 방식에 대해 "경선위원회가 발족되면 야권 단일화 시민참여 언택트 선거인단 모집 홈페이지를 만들면 된다"며 "수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단일화 방식들을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

나 "가장 중요한 게 여당 후보와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뽑는 방법으로 무엇이 최선인가 아니겠나"라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방법이 합의가 될 때, 그 방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일 때 많은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가 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서 함께 의논하면 국민의힘과 범야권에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현장 방문에서는 관계자로부터 센터 현황 설명을 듣고 인공지능 적용 여부, 운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함께 방문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묻기도 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제요원과 경찰이 24시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해 플랫폼에 신고가 접수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모범적인 도시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안 대표는 현장 방문 뒤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필수인데 CCTV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굉장히 위협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그걸 막고자 도입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형 CCTV"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에서 가장 인공지능형 CCTV가 많이 설치된 곳이 이북 성동구여서 방문하게 됐다"며 "서울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아예 인공지능형 CCTV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저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는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김종인, 저급한 유언비어...백신 공포 조장 멈추길"

"고령층 유효성 의문 제기됐으나 임상결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백신 불안 조장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

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 기피하는 백신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된다고 말했다. 제

1야당 대표 발언으로 믿기지 않는 저급한 유언비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 논란이 없는 백신"이라며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에서 승인하고 사용했다. 그동안 임상자료가 부족해 고령층 유효성 의문이 제기됐으나, 임상결과로 이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